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했다. /청와대

文 대통령 신년사 화두 경제성과·국정동력 방점

오늘 청와대 신년사 발표

일정 비우고 신년사 준비 매진
발표 후 새해 첫 국무회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예정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가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 국무위원들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신년사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를 알리는 해이자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 결과는 '현정권 종합 성적표'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에 따른 성적표가 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올해 검찰개혁 마무리 및 한반도 평화라는 굵직한 과제도 직면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여론측 전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올해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도약기의 마지막인 올해 국정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지지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레임덕에 빠지거나 결정된다는 얘기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오종식 기획비서관 내정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내정자,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내정자,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 비서관 내정자,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내정자

기획비서관 오종식,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청와대,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이해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동력 확충을 위해서다. 이번 인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실장직을 내려놓는 게 정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실장은 오는 4월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우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기조를 수립·기획하는 연설기획비서관을 기획비서관으로, 국정동향을 파악하는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상황실로 변경했다. 이어 기획

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에서 경제보좌관실 산하로 이관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현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나아가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변경하고,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무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합쳐져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편됐다. 이 자리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우승준 기자

“설 전 법안처리”

與野 공방

“민생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與野, 정초부터 대립에 법안 뒷전 통과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 등 1만6000여개 법안 자동폐기 위기

처리가 절실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초부터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나가며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막 노선"이라며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수천 가지는 된다"며 "더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뒤로 재쳐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악법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룬 채 위헌 선거법부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84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압박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지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6000여개 법안은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4차산업 개발·발전과 관련해 통과가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쟁으로 한국은 전세계가 뛰어난 4차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의 규제 완화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여전히(국회에) 묶여 있다"며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사관학교 시험 '채점오류' 탈락자 13명 구제·가입교

지난 2018년도에 치뤄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이 뒤늦게 구제된다.

국방부는 당시 탈락자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아 이번 달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교는 3월 입학 전에 신입 사관생도들이 받게되는 기초군사훈련을 의미한다.

2018년 7월 28일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중 국어과목 20번과 21번의 배점이 문제지와 문항분석표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 문항분석표에는 각각 3점과 2점으로 표기됐고, 각 사관학교는 채점을 문항분석표대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항분석표가 아니라, 문제지 배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채점 오류로 인해 배점이 뒤섞여 1차 시험에 떨어진 43명에게 재선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입교를 확정받은 13명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은 재시험을 통과했다. 또 채점오류를 수정한 뒤 커트라인을 넘은 1명은 재시험 없이 공사 최종합격을 받았고, 채점오류를 반영해, 최종선발에서 차순위로 떨어진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도 가입교를 하게 됐다.

/문형철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증응예비사관(우리군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에 해당)이 헬기로 공수된 야포를 이용해 조포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예비사관 46000명(2013년 기준) 규모에 방위의 3%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문형철 기자

軍, 동원예비군 축소... 대책마련 분주

“평시복무예비군 도입 시급” 주장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단축으로 발생할 동원예비군 자원 감소가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군안팎에서는 현역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강화한 '평시복무예비군'의 도입이 시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6일 "군 당국이 유사시에 동원될 예비군의 적정 규모인 '동원소요'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동원소요 감축의 대안으로 동원예비군의 정예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2.0'에 따

라 병력구조 감편과 함께 동원예비군 지정 인원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이고 항방예비군의 소요도 줄이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동원예비군훈련 부과를 기존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훈련대상자만 130만명에서 95만으로 줄뿐, 예비군 총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비뚤어지면 병출신의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간부예비군을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병은 전역후 4년차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7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전역후 최대 6년후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6년 이상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